

## 한국산업조직학회 「기업발전과 경쟁정책」에 관한 추계정책세미나 개최

한국산업조직학회는 11월 7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기업발전과 경쟁정책」이라는 주제로 2003년도 추계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제1부에서의 3가지 주제발표와 제2부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장승화 교수는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 서울대 경제학과 이상승 교수는 '기업집단정책의 나아갈 방향',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이병주·국장은 '시장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가 있었다.

장 교수는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금지청구제도의 도입과 손해배상청구시 시정조치의 선확정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이 교수는 출자총액개편방안에서 지주회사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둘 다 '타인의 자본을 이용한 지배주주의 지배력확장 억제, 즉 실질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행사 억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둘은 별개의 제도로 볼 수 없으므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국장은 시장개혁의 주요 추진과제로 첫째,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공개의 추진과 소유와 지배구조 괴리도가 낮은 기업, 지주회사그룹, 계열회사의 수가 일정 수 이하로서 3단계 이상 출자가 없는 기업집단이나 내부 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회사 등에 대한 출자총액 적용제외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투명·책임성 경영강화를 위해 전자투표제의 도입 등 기업 내·외부의 견제시스템을 보완하며, 셋째, 시장경쟁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카르텔, 허위광고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공익소송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제2부 종합토론에서 윤창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박병형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광식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 법경제팀장, 장지상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의 토론자들은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소송남용의 문제와 학문적 개념인 의결권 승수 개념을 정책적

으로 도입하여 집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 의결권 승수를 개별집단에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집단별로 적용할 것인가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 경쟁법학회 『경제법판례연구모임 제4차 세미나』 개최

경쟁법학회(회장 권오승교수, 서울대 법대교수)의 경제법판례연구모임은 “사원판매”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과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의미”라는 주제로 11월 14일(19:15) 서초동 (구)사법연수원에서 교수, 법조인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제1주제인 사원판매사건은 공정위 2002.10.31. 2002경축0940 의결인 (주)케이티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과 공정위 2003.6.3. 2002삼일1862 의결인 (주)케이티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이고, 제2주제인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과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의미는 대법원 2003.5.27. 선고 2002두4648 판결에 관한 것이다.

### 사건의 개요

1. 케이티는 2002년 PCS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영업직 직원에게 개인별로 7대 ~27대의 연간판매목표를 설정, 판매목표달성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부진 부서장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부가하는 등의 사원판매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2. 환영철강, 한국제강, (주)한보, 동국제강, 인천제철(주), 강원산업(주), 한보철강, 한국철강(주), 대한제강(주)은 2000. 2. 1.부터 동년 2. 7. 사이에 일반철근(톤당) 직경 10mm를 270,000원, 직경13mm를 265,000원, 직경 16mm를 260,000원에, 고장력철근(톤당) 직경 10mm를 280,000원, 직경 13mm를 275,000원, 직경 16mm를 270,00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였고, 이러한 동일한 가격상태는 2000. 3. 10.까지 계속되었다.

제1주제 발표자인 홍명수 박사(서울대 법대)는 사원판매의 사실행위 인정에 있어 피심인이 판매목표의 개인별 할당이나 인사고과에의 반영금지 등 지침을 발한 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오류이며, 특히 3개 지사의 표본조사를 기초로 90개 전 지사에 대한 사원판매행위에 강제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것은 표본조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사원판매행위로 인한 잠재고객을 포함한 경쟁자 고객의 실제구입효과에 대한 입증과 더불어 (주)케이티가 공기업이며 이동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자라는 점 등이 부당성 판단에 구체적으로 고려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2주제 발표자인 박해식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는 부당공동행위를 추정하는 경우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해석, 즉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의미, 존치필요성과 과징금부과기준의 투명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박 판사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5항의 구조적 특징과 경쟁제한성은 시장점유율은 물론 당해 상품시장의 특성과 현황, 상품의 속성과 태양, 유통구조, 가격결정구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 각 개별업체가 동종 거래분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요소인 위반행위의 시기인 실행개시일을 확정함이 없이 막연히 가격인상을 한 날을 실행개시일로 본 것은 과징금산정의 기초로서의 위반행위의 시기에 관한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 한국경제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

한국경제법학회(회장 박길준 연세대 법대 교수)는 지난 11월 22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B106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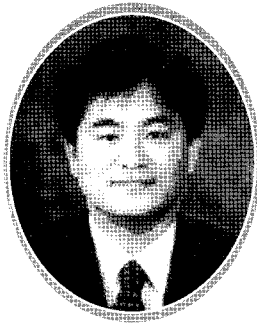
먼저 박세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는 “21세기 ‘법과 경제’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의 기초강연에서, 21세기에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시대로 문명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면서 제3차 법과 경제운동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시기에 ‘법과 경제’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세계화의 진전은 시장, 국가, 시민사회라는 세 가지 영역에 적절한 자기 역할을 줄 것과 세계정부 없는 지구적 통치구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둘째, 지식정보화는 신지식창출과 신정보생산을 요구하며, 이러한 신지식의 생산에 필요한 새로운 시각은 학문의 복합화, 융합화를 추구하는 법과 경제에서

나올 수 있다. 셋째,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민주주의와 지도자민주주의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민주적 시스템의 구축에 요구되는 이론과 분석틀 그리고 분석기법과 정책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학문분야가 법과 경제 분야이다. 또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과 경제는 '학문과 학문간의 대화', '학문과 현실간의 대화', 리더쉽 연구 및 개혁과정 내지 정책집행과정의 연구에 역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이기종 교수(안동대)는 "각국의 문화차이와 카르텔 정책의 상호관계"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이 경쟁정책과 상이한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와 경쟁정책의 상호관계에 관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비교문화심리학에서 개발된 CVD framework를 응용하여 각국의 문화차이가 경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역설하면서, 각국의 카르텔 정책과 국가문화와의 관계에 관한 시험적 연구의 결과를 그 예증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이어 CVD framework에 입각한 실증연구를 통해 각국 문화와 경쟁정책 사이의 상관관계가 밝혀질 경우, 그 연구결과를 경쟁정책의 다양한 국면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첫째, 각국 문화의 결에 맞춘 경쟁정책을 입안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각국 문화속에서 친경쟁적 전통을 부활시킴으로써 경쟁친화적 문화를 창달할 수 있다. 셋째, 친경쟁적이면서 보편적인 문화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국제경쟁정책의 채택을 촉진할 수 있다. 끝으로 이 교수는 CVD framework를 활용한 비교문화적 연구가 경쟁정책의 영역을 넘어서 지적재산권법, 무역법, 투자관련법, 금융법 등 경제법 전반의 비교연구에 널리 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신규회원사 소식

신규회원이심을 축하드립니다.



### 대림아이앤에스(주)

제갈정웅 대표이사 부회장

김영복 대표이사 사장

s/w자문,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공사업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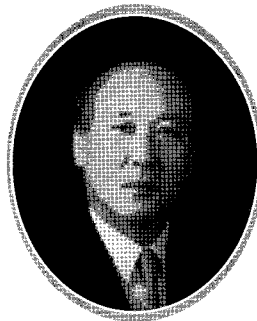


### 대한화재해상보험

이영동

금융 및 보험업

서울 중구 남창동 대한화재빌딩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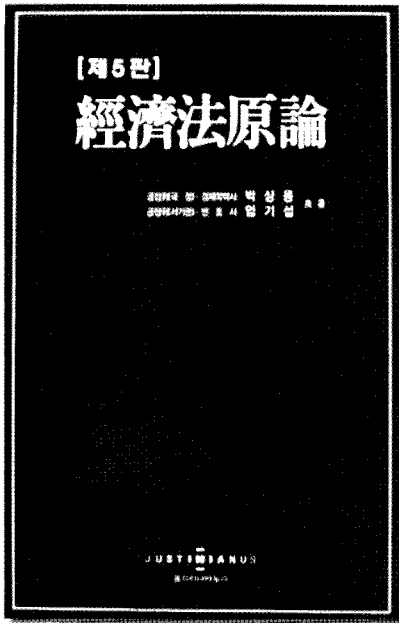
박동식

금융 및 보험업

서울 서초구 양재동 324-1 베벨회관 8층

## 발간안내

### [제5판] 경제법원론



저자  
박상용 | 공정위(국장) · 경제학박사  
엄기섭 | 공정위(서기관) · 변호사

이 경제법원론은 경제학박사이며 공정위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상용 박사와 변호사이며 공정위 서기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엄기섭 변호사가 10여년간의 공정위 근무 경험과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책이다. 이 경제법원론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경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나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나 일반 국민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으며,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경제법에 해당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5개 법률의 내용을 상세히 해설하였으며, 관련되는 판례·심결례를 풍부하게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의 경제법 관련 저술의 대부분을 참고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최근 경제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감에 따라 견해가 나뉘는 영역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기존의 저서들은 이에 대한 정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경제법의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으로 견해가 나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제법 특히 공정거래법의 경우 위반행위(예를 들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이 무엇이고 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즉 충족한 경우 어떠한 효과가 생기는가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기업이나 소비자의 경우 어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그 행위를 하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넷째, 이 경제법원론은 경제법을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우리나라의 전체 법체계와 조화되도록 해설하였다.